

# 광주 내년 '유아교육 대란' 오나

## 시의회, 유치원 누리 예산 598억 전액 삭감... 학부모들이 부담할 판

### “무원칙·무대책 예산 심의” 시민·교육계 비난 불붙

내년도 '유아교육 대란'이 불가피해졌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교육청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다. 정부를 압박하면서 어린이집 예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눈치 보는 데 급급, 편성한 예산조차 삭감해 유치원 학부모 등 피해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의원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저지른 데 따른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현)를 열고 광주시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598억원을 전액 삭감해 본회의로 넘겼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정심)가 지난 9일 정부 압박용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삭감한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정부가 떠넘겼다”는 논리로 어린이집 지원 경비(670억)를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 책임을 묻겠다며 당연한 책임져야 할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비조차 삭감했다는 얘기가.

이대로라면 광주지역 306개 유치원(공립 126·사립 180개)에 다니는 아이들 2만 3907명 교육비는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학부모 입장에서 유치원의 경우 사립은 유아학비 22만원과 방과후과정 수업료



누리 예산 편성 촉구 광주지역 어린이집 원장 300여명은 14일 오전 광주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집회를 열고 2016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7만원 등 29만원, 공립은 유아학비 6만원과 방과 후과정 수업료 5만원 등 11만원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 셈이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의 경우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시·도가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편성해놓은 만큼 추경예산안 편성 전까지 '땀질식'으로 우선 집행이 가능하다는 게 시의회 분석이다. 하지만 유치원은 교육청이 담당하는 만큼 예산이 삭감되면 시의회 예산재심의·의결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임시방편'식으로 집행할 방법이 없다는 게 시교육청 설명이다.

시의회가 삭감 예산을 '내부 유보금'로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의회 예산 심의가 열리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이 때문에 시의원들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는 커녕, 무원칙하고 눈치보기식 예산 심의로 유치원 '보육대란'을 현실화시켰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그나마 시의회 의원들은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교육청이 재정 형편을 들어 편성하지 않았던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 아이들의 방과후 과정 수업료를 편성하라며 한때 예산 심의를 거부했다가 시교육

청이 편성하자 다시 삭감, 원칙 없는 예산 심의를 했다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유치원측 반발도 거세다. “학부모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할 의원들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편성한 유치원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응이 교육계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당장, 시의회와 교육청을 향한 방문한다는 말도 들려온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의회 예산안 승인이 없으면 지원할 방법이 없다”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표지같이' 기소 교수 광주·전라 33명 포함

### 전국 110개대 182명 적발 유죄 확정 땀 대규모 퇴출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이 쓴 것처럼 출간하는 이른바 '표지같이' 대학교수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전라지역에서도 33명의 교수가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각 대학 재임용 심사에 반영돼 대규모 교수 퇴출 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14일 다른 교수가 쓴 대학 전공서적을 표지만 바꿔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표지같이 한 혐의(저작권

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로 전국 110개 대학 교수 등 182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 중 7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05명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해외연수 중인 교수 3명을 기소 중지하고 이들과 짜고 책을 펴낸 4개 출판사 임직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학교수가 '표지같이' 혐의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전남지역 대학교수도 대거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에 기소된 광주·전라지역 대학교수는 원저자 7명, 허위저자 26명 등 총 33명이다. 전북의 유명 4년제 대학과 광주의 2년제 전문대학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이 3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인천·경기와 광주·전라가 각각 33명, 대구·경북 24명, 강원 23명, 부산·경남 19명, 서울 13명, 제주 1명 등이었다.

이들 교수는 전공서적 표지에 적힌 원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살짝 바꾸거나 한 두 글자를 추가해 책 제목을 바꾸는 수법을 사용해 새 책인 것처럼 속여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저자의 이름을 추가하거나 책 디자인만 바꿔 여러 차례 발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국·공립대 교수 44명, 전직 교수 8명 등 사립대 교수 138명이 포함됐다. 유명 사립대와 지방 국립대 교

수는 물론 학과장도 9명이나 됐다. 교수 6명이 한꺼번에 적발된 대학도 3곳이나 된다. 이 중엔 해당 학과 교수의 3분의 1 이상이 적발된 곳도 있었다.

조사 결과, 교수들은 주로 호봉 승급이나 재임용 평가를 앞두고 연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표지같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학이 공동저서보다 단독저서에 더 높은 실적 점수를 부여하는 점을 노려 먼저 출판사에 표지같이를 제안하기도 했다.

검찰에 적발된 표지같이 책은 총 38권으로 모두 이공계열 전공서적이었다. 검찰은 인문·사회과학 서적과 달리 이공계열 서적은 일반 독자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학 구내서점 위주로 소량 판매돼 표지같이 관행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남 사장·현수교 8곳 긴급 안전점검

### 목포·완도대교 등 18일까지

목포대교 등 전남지역 사장교와 현수교 8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이 시행된다.

국도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서해대교 화재 사고를 계기로 14~18일 전국 14개 사장·현수교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전남은 목포대교, 완도대교, 고흥 거금대교·소록대교, 여수 거북선대교·돌산대교, 제1·2진도대교 등 총 8곳이 점검 대상이다.

이 중 가장 먼저 제2진도대교에 대한 안전점검이 14일 진행됐다.

국토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목포사무소는 제2진도대교 주탑 보강거더와 케이블 정착부 등의 구조적 이상 여부, 유지관리·진진계측시스템, 화재대비 소방시설, 피뢰침 등 안전시설의 작동 여부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다.

국토부는 점검으로 발견된 결함은 즉시 조치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정밀 안전진단으로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대법,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개시 최종 결정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악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개시가 최종 결정됐다. 과거사가 아닌 일 반 형사사건의 재심 결정은 극히 이례적 인데다 올해 8월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사라진 사건이어서 '진범'을 잡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고(31)씨의 재심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씨의 재심 개시가 최종 확정됐다. 재심은 광주고법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최씨는 16살이던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 전북 익산시 악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와 시비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2010년 만기출소했다. 그러나 판결 확정 이후에도 유씨를 살해한 진범 관련 첩보가 경찰에 입수되는 등 추종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 공원화장실서 신생아 발견 검찰, 사이버기자 3명 적발

광주시 광산구 한 공원 화장실에서 신생아가 버려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4일 광주공안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선운동 한 공원 여자화장실에서 신생아가 버려져 있는 것을 주민 김모(53)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화장실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들려 확인한 결과 세면대 위에 목도리와 외투에 싸인 남자 아이가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이는 곧장 광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공원과 주변 주택가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하는 한편 탐문수사를 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

건설현장을 찾아 업자를 협박하고 이 권에 개입해 금품을 챙긴 사이버 기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4일 전남의 공사 현장의 건축물 준공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해 수백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변 호사법 위반)로 모 언론사 기자 A(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공사현장을 찾아 부정적 기사에 목도리와 외투에 싸인 남자 아이가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이는 곧장 광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공원과 주변 주택가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하는 한편 탐문수사를 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여성 신체 수습차레 '몰카'

○지하철역과 상점 등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수습 차레에 걸쳐 신체를 촬영한 40대의 음탕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재판에 회부.

○14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헌법연구관 조모(40)씨는 지난 9월7일 오후 5시에 서울시 강남역에

서 휴대전화로 여성 승객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

○조씨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령 로펌을 거쳐 지난 2010년부터 사건 심리와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는 헌법 연구관으로 근무해왔는데, 헌법재판소는 조씨를 사건 심리를 다루지 않는 헌법재판연구원으로 인사 조치. /연합뉴스

## 펜션·박물관 / 미술관·식당·찻집등 최고 장소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 산25번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1분거리
- ▶대지 2441평, 건물 882평, 임야6726평
- ▶과거, 펜션 박물관 식당 찻집 운영(구/송학랜드)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가능 / 도 관광 진흥자금 유치 가능
- ▶현재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2.1%, 월219만원)
- ▶1년후 약 18억 정도 재 대출 가능
- ▶법인체 인수시 이전비 1억 정도 절약
- ▶시세/감정가 30억 정도
- ▶매매 18억 8천만원(12/31일까지 완불 조건)

공동중개환영 H.010-3605-5000

펜션, 리모델링 후(약 2억정도)  
연 2억이상 순수익 가능!

한솔펜션마을  
 다솔펜션마을  
 한옥펜션마을  
 담양댐  
 구/송학랜드  
 숙박시설 신축중  
 메타오토캠핑장  
 담양리조트  
 금성펜션단지  
 금성산성 오토캠핑장  
 골든마운틴펜션 신축중

담양 ←      → 금과